

BRIEF

Vol.
11

2022.
07.30.



작성: **문정희**(연구기획조정실장)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3층 T.055-713-7074 F.055-713-7093

www.gnwff.or.kr

경남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현황과 과제

01.

「지역성평등지수」로 본
경남의 성평등 수준

02.

경남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현황

03.

경남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

- 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한 추진기반 마련, 성평등 정책을 컨트롤 할 전담기구 설치, 예산의 확보,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정책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는 국가별, 지역별로 상이한 수준을 보이며, 정부의 성격에 따라 기능이 강화되거나 축소되는 등 부침이 반복되고 있음
- 중앙정부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변화는 지역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에 영향을 미침.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성가족부 존폐 논쟁이 있어 왔으나 최근에는 정부 조직개편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성평등 정책 후퇴에 대한 우려가 있음. 지방선거 이후에는 지역 성평등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지역의 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정책 추진이 중요함. 그러나 지역의 성평등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모습을 보여 왔음. 경남의 경우 홍준표 도정(2012~2017년) 당시 1997년부터 적립해온 여성 발전기금 57억이 폐지되기도 했음
- 경남은 2020년에 행정부서에 국 단위의 여성가족청년국이 생겼으며, 그해 독립된 형태의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인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이 전국에서 14번째로 뒤늦게 설립되었음. 경남의 자체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중앙의 정부 정책 방침을 소극적으로 따라가는 수준에 그칠 수 있음. 지역의 낮은 성평등 수준과 청년인구유출,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상황에 맞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본고에서는 현재 경남의 성평등 수준과 추진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모색해보고자 함

01 「지역성평등지수」로 본 경남의 성평등 수준

경남은 2011년부터 국가의 지역성평등지수¹⁾ 측정이 측정이 시작된 이래로 최근까지 하위-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음. 최근 발표된 2020년 지역성평등수준의 결과를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에서는 경제활동분야 순위가 가장 저조함. 경제활동분야 세부지표인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 성별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성비에서 상용근로자비율 성비 순위가 15위로 가장 낮으며,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 모두 14위에 머무르고 있음.
 - ▷ 2022년 1/4분기 기준 경남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2.1%로 전국 평균 53.2%보다 1.1%p 낮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에는 10위 수준임.
- 여성인권·복지 분야에서는 보건 분야 순위가 대체로 하위권이며, 복지외 안전 분야는 중하위권에 속함. 보건 분야는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가 14위로 가장 낮음. 안전 분야는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가 14위를 나타냄.
 - ▷ 2020년 경상남도 사회조사 자료에 의하면,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의 경우 37.4%가 두려움을 느낀 반면 남성은 7.8%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성평등 의식·문화분야는 상위권에 속하지만 일부항목은 중하위권을 유지함. 가족분야에서 가사노동 시간 성비와 가족관계만족도 성비는 14위를 나타냄. 문화·정보 분야에서 여가시간 성비와 인터넷 이용률 성비가 각각 12위와 16위를 나타냄.
 - ▷ 2020년 경상남도 사회조사 자료에 의하면, 가사분담을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거나 주로 하는 경우'가 74.4%에 달하며,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지거나 주로 하는 경우'는 3.2%에 불과함.

표 1 경상남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2015	중하위권	13위	8위	5위
2016	하위권	13위	7위	11위
2017	하위권	13위	9위	2위
2018	하위권	14위	13위	9위
2019	하위권	14위	14위	3위
2020	중하위권	14위	11위	5위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자료: 여성가족부(2021). 2021년 지역성평등보고서

1) 지역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가 매년 조사·공포하고 있으며, 3개 영역, 8개 분야, 23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02 경남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현황

경남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현황을 행정조직, 조례 및 기금, 여성가족 유관기관, 여성단체, 여성정책 연구기관, 경남성별영향평가센터를 통한 성주류화 제도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함.

(1) 행정조직

- 경상남도 행정조직 내에서 여성가족정책을 국 단위로 추진하게 된 것은 불과 2020년 들어서임. 2003년 이전에는 여성아동과(여성정책계, 여성복지계, 아동계)였으며 2003년에 여성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됨. 2010년에는 여성가족정책관을 신설하여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추진하였음. 2017년에는 행정부지사 직속 여성가족정책관을 복지여성보건국 내 여성가족정책과로 격하하는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했으나 여성단체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음. 2018년에는 양성평등정책담당 임기제 공무원을 6급(2년)으로 공채했으나 2020년에는 7급으로 직급을 낮추어 채용함.
- 2019년에는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해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보육 및 출산아동 기능과 인구전략, 노인일자리 기능을 결합하여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을 신설함. 또한 여성특별보좌관 신설하여 여성관련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했음. 2020년에 여성가족청년국이 신설되었으나 청년분야가 별도로 분리되고 아동청소년과가 신설되면서 현재 여성가족아동국(3과 11담당1센터)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음.

표 2 경상남도 행정체계 개편 과정

연도	내용	비고
2003년 이전	여성아동과(여성정책계, 여성복지계, 아동계)	
2003년	여성정책과로 명칭 변경	
2010년	여성가족정책관 신설하여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추진	
2017년	행정부지사 직속 여성가족정책관 → 복지여성보건국 내 여성가족정책과 조직개편안 무산	민선6기 (홍준표 도정)
2018년	양성평등정책담당 임기제 공무원 6급 공채(2년)	민선7기 (김경수 도정)
2019년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신설, 여성특별보좌관 신설	
2021년	양성평등정책담당 임기제 공무원 7급 공채 여성가족청년국 신설 → 여성가족아동국	

자료 : 이혜숙(2022), 지역여성운동과 젠더정치

(2) 조례·기금·계획

- 우리나라 여성발전기본법은 1995년도에 제정되었으나 경상남도는 2006년에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됨.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는 201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하였고 경남도 2015년에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함. 당시 홍준표 도지사는 채무를 이유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1997년부터 적립해 온 여성발전기금 57억을 폐지함. 이는 민선7기(김경수도정)에 들어서 다시 조례 개정을 통해 양성평등기금이 신설됨.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가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음. 경남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오다가 2018년에 중장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처음 수립하였으며, 2022년에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에 대한 <경상남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할 예정임.

표 3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와 기금

시기	조례명	비고
2006년 08월	-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정	
2015년 07월	- 경상남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면개정	민선6기 (홍준표 도정)
2015년 12월	-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하여 양성평등기금 폐지 * 1997년부터 적립해온 여성발전기금 57억원 폐지	
2016년	-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 경상남도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2018년	경상남도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 수립	민선7기 (김경수 도정)
2021년 02월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하여 양성평등기금 신설 * 양성평등기금 10억 확보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성·가족 관련 조례는 2019년부터 제정 건수가 확연히 늘어남. 돌봄노동자 지원을 비롯한 돌봄 조례가 강화되었으며, 성인지 예산제도, 여성폭력방지,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 등 성주류화 제도를 안착하고 여성권익과 건강을 보호하는 조례들이 제정되었음. 여성장애인을 위한 조례, 경남 여성사 연구를 지원하는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되기도 했음.

시기	조례명	비고
2008년 12월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 조례	
2009년 06월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09년 08월	경상남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2010년 01월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2010년 05월	경상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2011년 05월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	
2013년 10월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2019년 06월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2019년 08월	경상남도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년 12월	경상남도 보육 조례	
2020년 05월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	
2020년 06월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	
2021년 04월	경상남도 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제정	전국 최초
2021년 05월	경상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조례 전부개정	
2021년 06월	경상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2021년 12월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2022년 05월	경상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년 06월	경상남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국 최초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연구기관

-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연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남은 2005년에 경남발전연구원(현 경남연구원) 내 여성정책센터를 만들었고 이후 여성가족정책센터(2008년)로 명칭이 변경되어 재단이 설립된 해인 2020년까지 운영됨. 2011년 김두관 도정에서 여성정책 전담기구 설립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도지사 중도하차로 설립이 추진되지 못했으며, 2012년 홍준표 도정 들어서 여성정책 전담기구 추진이 무산되었음.
- 2018년 김경수 도지사가 당선되면서 다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논의가 재점화 되었음. 2019년에 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이어 2020년 2월 재단 설립에 관한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2020년 6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이 설립됨.
- 전국에서 여성정책 연구기관이 부설기관이 아닌 독립된 형태의 연구기관으로 설립된 것은 16개 시도 중 14곳으로 경남이 가장 늦게 설립됨.²⁾ 오랜 여성계의 노력 끝에 재단이 설립된 만큼 연구기능과 확대가 필요함.

(4) 유관기관

-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전달, 확산을 위해서는 정책 전달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함. 대표적인 여성가족정책 전달체계로는 여성취업지원기관과 가족지원기관이 있음. 그리고 성주류화 제도 운영기관인 성별영향평가센터 현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함.
- 여성취업지원기관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근거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남에는 광역형 1개소와 산단형 1개소, 시군에 7개소(창원, 마산, 진주, 김해, 김해동부, 거제, 양산)가 설치되어 있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창원, 마산, 김해에 각 1개소가 있음.
- 가족지원기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가족유형별로 이원화되어있는 가족서비스를 통합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되었음. 경남의 경우 시군 단위 19개소는 모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되었으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2년부터 '가족센터'³⁾로 명칭을 변경하여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경남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전액 도비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2008년에 설치된 경상남도미혼모지원센터를 전환하여, 2014년부터 미혼모에서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운영되고 있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어린이집과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남의 경우 광역 1개소, 시군 5개소(창원, 진주, 거제, 양산, 합천)가 운영되고 있음.

²⁾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곳은 경북으로 199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 부설기관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와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2곳임.

³⁾ 가족센터는 자녀에서 부모 및 노인세대까지 모든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수요자 중심 통합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경상성별영향평가센터⁴⁾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관련 업무 지원 등을 위해 2012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12년 경남발전연구원 수탁을 거쳐 2015년 창원대학교 수탁, 2021년부터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이 수탁·운영을 맡고 있음.
- 경상성별영향평가센터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경상남도에서 별도 예산을 마련하여 인건비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주요사업으로는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성인지예·결산 컨설팅, 성별영향평가 담당공무원 및 컨설턴트 워크숍, 컨설턴트 양성 및 교육사업,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등이 있으며,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민대상 양성평등교육, 청년 양성평등 인식개선 및 문화 확산 공모사업,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성주류화 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5) 여성단체

- 지역의 여성정책은 지역여성이 참여함으로써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여성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지역여성운동은 지역에 토대를 두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대변하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옴. 경남에는 다양한 성향을 가진 여성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경남여성단체협의회와 경남여성단체연합이 연대조직체로서 각각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의 여성단체들을 포괄하고 있음(이혜숙, 2022).
- 경남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의 복지증진,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하여 15개 회원단체가 활동하고 있음.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양성평등, 여성복지, 민주, 평화통일을 목적으로 경남여성회 등 14개 회원단체가 포함되어 있음. 이외에 풀뿌리조직과 통일문제에 관심이 많은 경남여성연대(8개 회원기관), 여성인권과 복지를 위해 상담소 활동을 하는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아동과 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활동을 하는 경남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등이 있음.
- 이외에 여성단체는 아니지만 경남여성가족재단이 설립된 이후 지역의 22개 여성가족 관련 기관으로 만들어진 경남여성가족정책네트워크가 있음. 경남여성가족정책네트워크는 참여기관 단체 간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주민의 정책 전달 창구인 경남여성가족정책포럼 발족을 준비함. 그 결과 2021년 12월에 180여명의 도민이 참여하는 경남여성가족정책포럼⁵⁾을 발족함. 향후 경남여성가족정책포럼은 도민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여성가족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4)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곳임.

5) 5개 분과로 구성됨.

(6) 여성 친화도시

-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이 주체가 되어 성평등한 지역을 만들어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경남은 지금까지 6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남해군)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았음. 경남은 최근 들어 2년 연속 지정 성과를 내는 등 여성친화도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를 위해 경상남도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군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비⁶⁾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여성친화도시 자문단, 여성친화도시 정책포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03 경남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

경남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경남의 성평등 수준과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현황을 살펴보았음. 지역성평등지수로 살펴본 경남의 성평등 수준은 중하위권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에서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행정조직은 여성가족아동국의 위상을 갖추었으나 분야별 내실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인력과 조직 확대가 필요함. 조례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제·개정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양성평등기금은 지속적으로 적립해 나갈 필요가 있음. 연구기관은 독립된 형태로써 그 기능과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며, 정책 실행 기관이자 정책 전달기구로서 유관기관은 시군에 설치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함. 여성단체와는 거버넌스 구축 통한 연대활동을 활성화해 나가야 함. 구체적으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1) 법제도

- 법·제도는 성평등 확산의 추진 근거가 됨. 지역특수성과 시대변화에 따른 젠더이슈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조례로 제정해 나가야 함.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성인지 역량 강화를 통한 조례의 성인지적 관점 적용이 필요함. 또한 지자체 각종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기존 조례의 성차별적 요소를 개정해 나가고, 새로운 정책 수립 위해 필요한 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입법화해 나가야 함.

(2) 행정조직

- 행정조직의 형태가 계선기관형⁷⁾인 경우 직무, 권한, 책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업무수행이 능률적이며 신속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경상남도는 2021년에 여성가족아동국(여성정책과,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과)의 체계를 갖추고 60명 규모의 인력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일자리, 아동돌봄 등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담부서 인력 확충이 필요하며 기초지자체 의회 및 공무원 성인지 및 정책 역량 강화 위한 노력이 필요함. 양성평등정책 업무 강화를 위해서는 부서 내 전문직위제(양성평등전문관)를 지속화하고 역할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6) 재협약 55백만원, 신규협약 15백만원 지원(시군비 별도 매칭)

7) 행정상의 결정권과 집행권을 가지며, 계층적 구조의 수직적 계열을 형성하여 명령이나 보고가 전달되는 형태임

(3) 재정·예산

- 성평등 예산에는 보육, 출산, 아동, 가족관련 예산이 혼재되어 있음. 여성 및 성평등 정책의 단위사업 구성을 늘리고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함. 성인지 예·결산 재정사업에서 성평등 수준이 낮은 영역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예산 확대를 통해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관련 사업을 강화해 나가야 함. 지역개발과정에서도 특별재정을 확보하여 성평등정책을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양성평등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양성평등기금 수혜 대상 및 사업의 다양화, 기금운영방식의 다각화, 기금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기금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연구기관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의 역할 및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경남의 인구유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등 모든 영역에서 젠더 불평등과 성별격차 해소 위한 정책 발굴을 적극 추진해야 함. 기초지자체를 비롯하여 유관기관과 성평등 정책의제 발굴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창구를 활성화하도록 해야 함. 정책연구뿐만 아니라 관련 교육·사업과 연계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도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

(5) 전달체계

- 경남의 시군 특수성에 맞추어 돌봄, 일자리, 젠더폭력방지 등 정책영역별 전달체계 진단을 통해 정책 실행을 강화할 수 있는 기관 설치 확대가 필요함. 경남성별영향평가센터는 지역양성평등센터로 확대하여 경남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의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6) 여성대표성

- 여성인력의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양성평등강사양성, 여성리더교육, 직업훈련교육 등 여성인재육성 위한 교육을 개발하고 양성을 확대해 나가야 함.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참여를 높이기 위해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및 각종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을 50% 이상 확대하고 광역 및 기초 여성의원 진출을 통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7) 젠더 거버넌스

- 지역여성정책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학연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함. 기존 경남여성가족 정책네트워크 및 경남여성가족정책포럼을 활성화하고 경제, 교육 등 참여분야를 넓히고 네트워크 폭을 확장해 나가야 함. 또한 경남의 공공기관과 18개 시군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및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경기도와 같이 공공기관 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가칭) 시장·군수성평등정책협의체와 같은 논의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